

#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시기별 외연 확대 특징과 구체적인 이슈

李 頤 窺\*

- |  |                                    |
|--|------------------------------------|
| I. 연구목적과 문제제기                            | B. 중국 국가핵심이익의 집권시기별 특징             |
| II.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분석 방법                     | C. 중국 국가핵심이익 포괄적 주제별 구체적<br>이슈와 특징 |
| III. 중국 국가핵심이익의 시기별 외연 확대<br>특징과 구체적인 이슈 | IV. 결론                             |
| A. 중국 국가핵심이익의 시기별 외연 확대<br>특징            |                                    |

## 한글초록

이번 연구는 인민일보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중국의 구체적인 핵심이익 이슈를 분석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국가핵심이익’을 키워드로 2001년 1월1일부터 2016년 10월27일까지의 인민일보 전문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키워드와 구체적인 이슈들의 연도별 빈도수를 살펴보면, 후진타오 집권 10년에 비해 시진핑 집권3년10개월 동안의 빈도수가 더 높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후진타오 집권 시기 후진타오 등 주요 지도자들의 발언이 거의 인용되지 않는 것에 비해, 시진핑 집권 시기 시진핑의 국가핵심이익 관련 발언은 직·간접적으로 인용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진핑 집권 시기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핵심이익이 강조되고 있음은 물론 그 구체적인 이슈와 문제들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포괄적 주제와 구체적 이슈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까지는 ‘대만’, ‘티베트’, ‘마카오’와 ‘신장’ 등 ‘국가주권’, ‘국가통일’과 관련된 이슈들이 대부분 검색이 되었다. 포괄적 주제에 속하는 개념 역시 2008년도에 거론된 ‘발전이익’을 제외하곤 ‘국가주권’, ‘국가안보’, ‘영토완정’, ‘국가통일’ 등이 주로 거론이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2010년부터는 ‘중국 헌법이 확립한 국가정치체도와 사회의 전반적 안정’과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보장’ 분야의 구체적 이슈들도 거론되기 시작한다.

\* 재단법인 여시재 부연구위원, obscurecount@gmail.com

셋째, 포괄적 주제별 구체적 이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국가주권’ 국가핵심이익에 속하는 이슈에는 ‘티베트’, ‘마카오’, ‘신장’, ‘홍콩’ 그리고 ‘독립’과 ‘역사’ 문제 등이 있다. ②‘국가안보’ 국가핵심이익에 속하는 이슈에는 ‘영공안보’, ‘조국평화’, ‘한반도 문제’ 등이 있다. ③‘영토완정’ 국가핵심이익에 속하는 이슈에는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변경권익’, ‘해양권익’, ‘남중국해’, 그리고 ‘동중국해’ 문제 등이 있다. ④‘국가통일’ 국가핵심이익에는 ‘대만’ 문제가 대표적이다. ⑤‘중국 헌법이 확립한 국가정치체도와 사회의 전반적 안정’ 국가핵심이익과 관련된 이슈에는 ‘핵심가치관’, ‘민족단결’, ‘민족존엄’, ‘이데올로기’, ‘파룬궁’, ‘국가정권’, ‘대중문화’ 등의 문제들이 포함이 된다. ⑥‘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보장’ 국가핵심이익과 관련된 이슈에는 ‘토지’, ‘데이터 주권’, ‘정보강역’, ‘국가현대화’, ‘인민복지’, ‘중대형 국유기업의 핵심상업기밀’ 그리고 ‘과학기술혁신’ 등이 포함된다.

**주제어 :** 핵심이익, 인민일보, 국가주권, 국가안보, 영토완정, 국가통일, 중국 헌법이 확립한 국가정치체도와 사회의 전반적 안정,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보장

## I. 연구목적과 문제제기

중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s, 核心利益)’개념은 2009년을 기점으로 각계의 주목을 받게 된다.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이 2009년 7월 제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S&ED) 회의석상에서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sup>1)</sup> 그 해 11월 북경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서로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삽입이 되면서부터이다.<sup>2)</sup>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1) 다이빙궈는 2009년 7월에 중국의 핵심이익을 ‘중국의 국체, 정체와 정치 안정(中國的國體, 政體和政治穩定), 즉 기본체도와 국가안보 수호(維護基本制度和國家安全), ‘국가주권과 영토완정’(國家主權和領土完整), 그리고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經濟社會的持續發展)’으로 규정하였다. 2010년 12월에는 ‘공산당 영도, 사회주의 제도 및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共產黨的領導, 社會主義制度, 中國特色社會主義道路), ‘중국의 주권안정, 영토완정, 국가통일’(主權安全, 領土完整, 國家統一), ‘중국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보장’(中國經濟社會可持續發展的基本保障)’으로 재규정하였다. 김홍규, 『중국 핵심이익 연구 소고(小考)』, 『동북아연구』 제28권 2호 (2013), 292-293쪽.

2)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 two sides agreed that respecting each other’s core interests is extremely important to ensure steady progress in China-US relations.”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us-china-joint-statement>(검색일: 2016.11.20).

부터 노골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중국의 ‘공세적(assertive)’ 대외정책 행태와 이와 관련된 논쟁에 ‘핵심이익’ 개념이 포함되면서, 내포된 의미와 적용범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sup>3)</sup>

최근까지 중국이 보이고 있는 핵심이익 관련 외교적 언사와 행태는 마이클 스웨인(Michael Swaine)이 2011년에 분석한 공세적 행태의 특징과 우려를 대부분 보여주고 있다.<sup>4)</sup> 첫째, 중국은 계속적으로 이 개념을 공식화하고 있다. 2011년 9월 6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중국의 평화발전(中國的和平發展)』 백서를 통해 중국의 핵심이익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였고,<sup>5)</sup> 후진타오(胡錦濤), 원자바오(溫家寶), 시진핑(習近平) 그리고 리커창(李克強)등 최고지도부들의 연설을 통해 이 개념에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sup>6)</sup> 둘째, 중국은 핵심이익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양보와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태도를 원칙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무력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1995-6년에 발발한 제4차 대만해협위기 사건은 중국의 이러한 의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sup>7)</sup> 최근 10년 ‘해양권익’(海洋權益) 수호를 빌미로 남중국해(南海) 등지에서

3) See Alastair Iain Johnston, “How New and Assertive is China’s New Assertiveness?” *International Security*, Vol.36, No.4 (Spring 2013), pp.17-20.

4) Michael D. Swaine. “China’s Assertive Behavior - Part One: On ‘Core Interests,’” <http://www.hoover.org/research/chinas-assertive-behavior-part-one-core-interests>(검색일: 2016.10.28).

5) 『중국의 평화발전』 백서에서는 중국의 국가핵심이익을 ‘국가주권’(國家主權), ‘국가안보’(國家安全), ‘영토완정’(領土完整), ‘국가통일’(國家統一), ‘중국 헌법이 확립한 국가정치체도와 사회의 전반적 안정’(中國憲法確立的國家政治制度和社會大局穩定), 그리고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보장’(經濟社會可持續發展的基本保障) 등 여섯 가지로 규정하였다. “《中國的和平發展》白皮書(全文).”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1-09/06/c\\_121982103.htm](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1-09/06/c_121982103.htm)(검색일: 2016.10.28).

6) 章迪禹, “中國‘核心利益’之辯,” 『世界知識』, 第19期 (2011), pp.15-21.

7) ‘대만’문제는 대표적인 중국의 국가핵심이익이다. 제4차 대만해협위기 사건은 비록 중국이 ‘핵심이익’을 규정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국가핵심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무력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핵심이익’으로 규정하기 전에도 사건의 전개 상황에 따라 무력사용을 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핵심이익’으로 규정된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대만 문제 관련 무력사용 가능성에 대한 장쩌민(江澤民)의 주요 발언은 아래 문헌 참고 바람. 『江澤民文選(第一卷)』(北京: 人民出版社, 2006), pp.85, 286, 419-422.

보이고 있는 공세적 대외정책 언행 역시 이러한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sup>8)</sup> 셋째, 중국은 쟁점이 있는 국제적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핵심이익의 범주에 넣고 있다. 즉, 핵심이익의 외연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핵심이익 개념의 내용과 적용범위 역시 수정을 반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시진핑은 총서기가 된 이래 핵심이익을 ‘주권’(主權), ‘안보’(安全) 그리고 ‘발전이익’(發展利益) 등 세 가지로 재규정하였다.<sup>9)</sup>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지속적인 재규정과 외연의 확대가 문제시 되는 이유는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이에 따른 중국 대외정책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자국의 부상이 논쟁이 되기 시작한 1990년대를 기점으로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s, 國家利益)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더욱 세분화 시켜 ‘핵심이익’까지 규정하게 되었다.<sup>10)</sup> 국가이익이 점차 중국 대외행위의 ‘사상적 근원’(思想根源)이 되면서 미국 혹은 주변국과 국가이익을 사이에 두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sup>11)</sup> 비록 핵심이익과 관련하여 중국 내에 ‘핵심이익 확대론’, ‘보수적 핵심이익론’ 그리고 ‘절충론’ 등의 논쟁이 일어나고 있고,<sup>12)</sup> 무력 사용만이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중국의 비타협적 태도와 대만(台灣), 티베트(西藏), 신장(新疆)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최후

8)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 특히 군사적 전략과 행위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아래의 논문을 참고 바람. Toshi Yoshihara and James R. Holmes, “Can China Defend a ‘Core Interest’ in the South China Se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34, No.2 (Spring 2011), pp.45-59.

9) 바이두(百度)신문 검색 결과 ‘국가의 주권, 안보 그리고 발전이익’은 2010년 전후부터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주장되어지고 있다. 예로, 2010년 3월 7일 중국 외교부 부장 양제츠(楊潔篪)는 제11기 전국인대 3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주권, 안보 그리고 발전이익’을 ‘본국의 핵심이익과 존엄’이라고 하였다.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0-03/07/content\\_13115174.htm](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0-03/07/content_13115174.htm)(검색일: 2016.10.28).

10) 章迪禹 (2011), p.19.

11) 張清敏, 李政窺, “中國對外行爲的思想根源探析,” 『外交評論』, 第4期 (2011), pp.14-18.

12) 김홍규 (2013), 301-305쪽; 중국 학계의 ‘핵심이익’에 관한 논쟁과 연구 현황은 아래 논문 참고 바람. Jinghan Zeng, Yuefan Xiao and Shaun Breslin, “Securing China’s Core Interests: the State of the Debate in China,” *International Affairs*, Vol.91, No.2 (2015).

의 수단으로 무력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은 중국의 급속한 국력신장으로 인해 핵심이익 관련국의 우려를 더욱 초래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sup>13)</sup>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핵심이익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 혹은 주변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방안 연구는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중국의 핵심이익, 즉 관련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여전히 몇 명 중국 지도층의 발언과 중국 정부의 발표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고, 핵심이익 관련 구체적인 이슈와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실증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남중국해문제,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釣魚島)문제<sup>14)</sup> 그리고 ‘한반도’문제<sup>15)</sup>등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논쟁처럼 어떤 이슈

- 13) 미국과 중국 간의 이슈별 핵심이익 이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동아시아 연구원(EAI) 연구보고서를 참고 바람. 김양규, “핵심이익의 충돌과 미중관계의 미래,” [https://www.eai.or.kr/data/bbs/kor\\_report/201105069371864.pdf](https://www.eai.or.kr/data/bbs/kor_report/201105069371864.pdf)(검색일: 2016.10.28).
- 14)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관점에서 남중국해와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이슈를 논한 것은 아래 Chinafile 사이트에 실린 두 편의 글과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회위원회(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의 보고서를 참고 바람. Shai Oster, Andrew J. Nathan, Orville Schell, Susan Shirk, Tai Ming Cheung and John Delury, “What’s Really at the Core of China’s ‘Core Interests’?” <https://www.chinafile.com/.../whats-really-core-chinas-core-interests>(검색일: 2016.6.25); Stephanie T. Kleine-Ahlbrandt, Susan Shirk and Wang Yizhou, “Does Promoting ‘Core Interests’ Do China More Harm Than Good?” <http://www.chinafile.com/conversation/does-promoting-core-interests-do-china-more-harm-good>(검색일: 2016.6.25); Caitlin Campbell, Ethan Meick, Kimberly Hsu and Craig Murray, “China’s ‘Core Interests’ and the East China Sea.” <http://www.uscc.gov/sites/default/files/Research/China's%20Core%20Interests%20and%20the%20East%20China%20Sea.pdf>(검색일: 2016.7.10).
- 15) 한반도 이슈와 관련해서는 아래 논문 참고 바람. 김홍규 (2013), 295-297쪽. 김홍규 교수는 2014년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또 다른 연구에서 북한지역이 중국이 전제하는 핵심이익의 영역에 포함될 개연성은 낮고, 대체적으로 중국의 핵심국가이익에는 2차적인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였다. 나영주 교수 역시 현재는 한반도의 문제가 중국의 핵심이익의 범주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힘들지만, 통일 과정에서 한반도의 정세 변화와 주변국과의 관계 여하에 따라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김홍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한중관계」, 『전략연구』, 통권 제61호 특별호 (2014), 223쪽; 나영주, 「한반도 통일에 관한 중국의 인식과 전략」, 『국제정치연구』, 제18집 2호 (2015), 113-125쪽.

가 중국의 핵심이익 범주에 속하는가에 대한 논란과 추측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제기한 것처럼 중국은 핵심이익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이슈들이 추가가 되면서 확대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다른 한편, 다이빙귀 등 중국 지도자들의 발언과 『중국의 평화발전』 백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외교안보 관련 이슈 외에 국내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문제 역시 중국의 핵심이익 범주에 포함이 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이슈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상의 문제의식에 기반 하여 중국의 ‘핵심이익’, 특히 관련된 구체적인 이슈들을 ‘인민일보’(人民日報) 전문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분석해 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① 시기별로 어떠한 이슈들이 추가가 되면서 핵심이익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는가? ② 후진타오 집권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시진핑 집권 시기 중국은 핵심이익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가? 그러하다면, 어떠한 특징을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는가? ③ 『중국의 평화발전』 백서의 분류법에 의거하여, 핵심이익별로 어떠한 구체적인 이슈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거론되고 있는가? 등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기존의 중국 핵심이익 관련 연구를 보완한다는 차원 외에, 향후 관련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II.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분석 방법

중국의 구체적 핵심이익 이슈(혹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인민일보를 내용분석 하였다.

첫째, 이번 연구에서는 인민일보를 분석 자료로 선택하였다.<sup>16)</sup> 대부분

16) 중국의 CNKI를 통해서 인민일보를 검색하였고, 인민일보 해외판 등 인민일보 계열의 신문들은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밝힌다. 분석 대상은 기사와 칼럼을 포함한 검색된 모든 자

의 선행연구와 달리 인민일보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한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① 인민일보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직속되어 있는 중국공산당 기관지로 중국 정부와 엘리트들의 관점과 시각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sup>17)</sup> 즉, 이 주제와 관련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기에 단일 자료로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sup>18)</sup> ② 칹징한(曾敬涵) 등의 2008년에서 2013년 사이에 중국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핵심이익’ 관련 108편의 중문논문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중국 국내 학자들 사이에 ‘핵심이익’ 개념과 이와 연관된 이슈에 대한 많은 토론과 연구는 있지만, 대부분 일치된 의견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많은 연구가 특정 사건에 의한 것(event-driven)이거나, 주요 지도자들의 관점과 발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지적하였다.<sup>19)</sup> 즉, 2차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도 구체적인 중국의 핵심이익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연구결과가 중국공산당의 의견을 대변한다고도 할 수 없다.

둘째, 이번 연구에서는 ‘국가핵심이익’(國家核心利益)을 검색 키워드로 선택하였다. 마이클 스웨인 등 기존 중국의 핵심이익 연구자들은 ‘핵심이익’을 키워드로 내용분석 혹은 텍스트 분석(tex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2015년과 2016년 동안의 ‘핵심이익’을 키워드로 검색된 305편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핵심이익’은 외교무대에서 ‘서로의 핵심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거론된 기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료를 사용하였다.

- 17) 張清敏, 李啟鵬 (2011), p.6. 실제로, 인민일보는 당의 이념, 노선, 방침, 정책 그리고 중앙의 중대결정과 안배의 적극적인 선전을 주요 역할로 명시하고 있다. <http://www.people.com.cn/GB/50142/104580/index.html>(검색일: 2017.1.4).
- 18) ‘광명일보’(光明日報) 역시 분석 자료로 고려를 할 수 있지만 인민일보와 비교하였을 때 대표성이 떨어진다. 광명일보는 중공중앙이 주관과 운영의 주체이지만, 중앙선전부가 대신 관리(代管)를 하고 있는 지식계층에 입각한 중앙당 기관지이다. 다른 한편,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료 같은 경우는 외교부라는 부서 특성상 외교 관련 이슈 외에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중국 핵심이익의 외연확대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번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자료라고 할 수 없다.
- 19) Jinghan Zeng et al., (2015).

이슈와 문제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반해, ‘국가핵심이익’을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들은 대부분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맥락에서 핵심이익이 거론 혹은 사용되는지 분석이 가능하였다.

셋째, 인민일보 전문 검색기간을 2001년 1월 1일에서 2016년 10월 27일로 하였다.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결과, 2003년 당시 외교부장인唐家璇이 중국 지도층으로서의 처음으로 ‘핵심이익’개념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핵심이익’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인민일보가 중국 공산당 지도층의 생각과 정책을 반영하는지 여부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목적으로 2001년을 기점으로 검색을 실시하였다.<sup>20)</sup>

넷째, 이번 연구에서는 이하와 같은 단위(units)화를 기준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국가핵심이익’ 혹은 ‘국가의 핵심이익’(國家的核心利益)을 코딩단위(coding units)로, ‘단락’을 배경단위(context units)로 측정을 하였다.<sup>21)</sup> 분석 과정에서 ‘단락’ 단위로 분류가 불가능하지만 특정 이슈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사일 경우에는 ‘통사단위’(syntactical units)를 ‘복수의 단락’ 혹은 ‘문장’으로 확대하였다. 하지만,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단락’ 단위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이번 연구의 목적이 ‘국가핵심이익’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슈(혹은 문제)를 밝혀내는데 있기 때문에 이슈 간 관계에 대한 테스트(test)를 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는 검색 키워드 간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주로 빈도(수)와 백분율 등의 묘사(description)를 통하여 설명이 된다.

마지막으로 ‘신뢰도’(reliability)측정과 관련하여, 이번 분석은 독자적으로 추진된 연구이므로 ‘종적 신뢰도’(within)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연습단계에서 기사가 실린 시간 순으로 138편 중의 25%에 해당하는 34편에 대

20) 2016년 10월 27일까지의 검색 결과로 분석을 한 이유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검색을 한 후에 분석에 들어간 점 외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음을 밝힌다.

21) 인민일보 전문에 대한 분석결과, ‘국가핵심이익’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슈는 대부분 ‘~와 관련’(事關, 關係, 涉及)있다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한 코딩을 일주일의 시간차를 두고 2번 실시하였다. 정식코딩단계에서는 40%에 해당하는 55편의 기사에 대한 신뢰도 측정을 역시 일주일의 시간차를 두고 2번 실시하였다. 신뢰도 측정결과 0.909(%)를 나타내었다.<sup>22)</sup>

### Ⅲ. 중국 국가핵심이익의 시기별 외연 확대 특징과 구체적인 이슈

#### 1. 중국 국가핵심이익의 시기별 외연 확대 특징

2000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27일까지의 인민일보 전문을 ‘국가핵심이익’을 키워드로 내용분석을 한 결과, 총37개 포괄적 주제와 구체적 이슈가 국가핵심이익에 포함이 되었다. 이 중에서 2번 이상 거론된 주제와 이슈는 총21개이고, 10번 이상 거론된 것도 8개나 된다. 빈도수를 기준으로 보면, 포괄적 주제는 ‘국가주권(혹은 ‘주권’: 47번)’, ‘국가안보(혹은 ‘안보’: 34번)’, ‘발전이익’(30번), ‘영토완정’(領土完整: 24번) 순으로 거론이 되었고; 구체적인 이슈는 ‘대만’(30번), ‘티베트’(14번), ‘해양권익’(10번)의 순으로 거론이 되었다. 2004년 ‘대만’문제가 국가핵심이익의 맥락에서 처음으로 거론된 이후의 포괄적 주제와 구체적 이슈의 거론 기점과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첫째, 2005년 전후부터 ‘국가주권’과 ‘영토완정’ 두 개념은 국가핵심이익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고, 그 핵심에는 ‘대만’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과 2007년 사이에 ‘대만’은 총13번 거론이 되는데, 그 중에서 9번이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의 맥락에서 거론되었다.

둘째, 2008년 전후부터 ‘안보’, ‘통일’(統一, 2009년부터) 개념이 국가핵

22) 백분율 신뢰도 검사 결과 0.909(%)가 나왔기 때문에, Scotti's Pi와 Cohen's Kappa 공식을 통한 신뢰도 검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십이익으로 강조되기 시작하고, ‘대만’ 문제 외에 ‘티베트’, ‘마카오’(澳門, 2009년부터), ‘신장’(2009년부터) 등 ‘국가주권’과 관련된 이슈들이 추가되기 시작한다. 이 네 가지 이슈들은 2016년까지 꾸준히 국가핵심이익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

셋째, 2009년 전후부터 ‘중국 헌법이 확립한 국가정치제도와 사회의 전반적 안정’(中國憲法確立的國家政治制度和社會大局穩定, 2011년 ‘중국의 평화발전’ 백서 기준) 범주에 포함되는 개념들과 이슈들이 거론되기 시작한다. 관련 개념과 이슈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① ‘민족단결’(民族團結)은 2009년과 2011년 사이에 총3번 제시가 되는데, 특히 2011년에는 공산당의 리더십,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국가주권’과 ‘민족존엄’의 맥락에서 거론이 되었다. ② ‘핵심가치관’(核心價值觀)은 2010년과 2014년에 한번 씩 거론이 되는데, 2010년에는 ‘대중문화’(公民文化)건설과 함께 일종의 도구적 의미에서 거론이 되었다. ③ ‘민족존엄’(民族尊嚴)은 2011년과 2016년 사이에 총3번 거론이 된다. ④ ‘의태올로지’(意識形態)는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한번 씩 거론이 되는데, 국가핵심이익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논하였다. 이 외에 ‘사회조화 안정’(社會和諧穩定), ‘기본제도’(基本制度), ‘국가정권’(國家政權), ‘파룬공’(法輪功)문제 등이 국가핵심이익 혹은 관련된 이슈임을 알 수 있다.

넷째, 2010년 전후부터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문제가 국가핵심이익 범주에 포함되기 시작하였고, 시진핑이 중공중앙 총서기에 임명되는 2012년을 기점으로 ‘해양권익’이 거의 매년 거론되기 시작한다.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총7번 거론이 되는데, 그 중 5번은 ‘주권’, ‘안보’ 그리고 ‘발전이익’의 맥락에서 제기되었다. 한편, 2014년 ‘남중국해’ 문제와 2016년 ‘동중국해’(東海) 문제가 국가핵심이익의 범주에 포함된다. 해양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문제가 국가핵심이익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다가, 2012년부터는 ‘해양권익’, ‘동중국해’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 등 좀 더 큰 범위에서 논해지고 있다.

〈표 1〉 시기별 국가핵심이익 외연확대 상황

기점	개수(추가)	포괄적 주제와 구체적 이슈
2004년	1	대만
2005년	3(2)	대만, 국가주권*, 영토완정*
2006년	4(1)	대만, 국가주권, 영토완정, 역사*
2007년	3	대만, 국가주권, 영토완정
2008년	5(3)	대만, 국가주권, 국가안보*, 티베트*, 발전이익*
2009년	8(4)	대만, 국가주권, 영토완정, 티베트, 국가통일*, 마카오*, 신장*, 민족단결*
2010년	8(3)	대만, 국가주권, 영토완정, 티베트, 국가통일, 다오위다오*, 핵심가치관*, 대중문화*
2011년	12(5)	국가주권, 영토완정, 국가안보, 티베트, 발전이익, 국가통일, 민족단결, 민족존엄*, 국가정치제도와 사회의 전반적 안정*, 사회조화 안정*, 영공안보*, 토지*
2012년	9(2)	국가주권, 영토완정, 국가안보, 발전이익, 국가통일, 마카오, 다오위다오, 해양권익*, 홍콩*
2013년	11(2)	대만, 국가주권, 영토완정, 국가안보, 발전이익, 국가통일, 다오위다오, 국가정치제도와 사회의 전반적 안정, 해양권익, 이데올로기*, 중대형 국유기업의 핵심 상업기밀*
2014년	16(5)	대만, 국가주권, 영토완정, 국가안보, 티베트, 발전이익, 신장, 핵심가치관, 민족존엄, 해양권익, 독립*, 데이터 주권*, 파룬궁*, 정보강역*, 기본제도*, 남중국해*
2015년	12(4)	대만, 국가주권, 국가안보, 티베트, 마카오, 신장, 홍콩, 이데올로기, 인민복지*, 국가현대화*, 조국평화*, 과학기술혁신*
2016년	19(5)	대만, 국가주권, 영토완정, 국가안보, 티베트, 발전이익, 국가통일, 마카오, 신장, 민족존엄, 해양권익, 홍콩, 국가독립, 인민복지, 남중국해*, 동중국해*, 국가정권*, 변경이익*, 한반도*

참고: '\*' 표시한 것은 그해 새로 추가된 이슈를 나타냄.

다섯째, 2008년 전후부터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보장’(經濟社會可持續發展的基本保障, 2011년 ‘중국의 평화발전’백서 기준) 범주에 포함되는 개념들과 이슈들이 제시되기 시작한다.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2011년부터 ‘토지’(土地)문제를 시작으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슈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핵심이익과 관련된 이 범주의 주요 이슈로는 ‘중대형 국유기업의 핵심상업기밀’(國有大中型企業的核心商業秘密), ‘데이터 주권’(數據主權), ‘정보강역’(信息疆域), ‘인민복지’(人民福祉), ‘과학기술혁신’(科技創新) 등이 있다.

여섯째, 2016년 국가핵심이익 범주에 새로 추가된 안보관련 이슈로는 앞서 제기한 ‘동중국해’문제 외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와 관련된 ‘한반도’문제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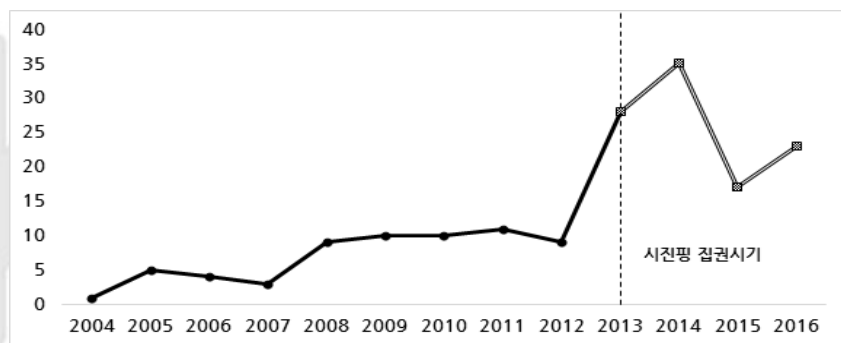
## 2. 중국 국가핵심이익의 집권시기별 특징

중국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국가이익’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였고, 후진타오가 집권하게 되는 2003년을 전후부터 ‘핵심이익’ 혹은 ‘국가핵심이익’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인민일보 내용분석을 통해 후진타오 시대에서 시진핑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떠한 전반적인 특징, 즉 경향을 보이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핵심이익’과 ‘국가이익’의 빈도수를 비교하였을 때, 2009년을 기점으로 ‘핵심이익’개념이 ‘국가이익’ 만큼 자주 거론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이익’과 ‘핵심이익’을 키워드로 2001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27일까지의 인민일보 전문을 검색한 결과, ‘국가이익’과 ‘핵심이익’은 각각 총 2710편과 1729편에서 거론이 되었다. 2008년까지는 ‘국가이익’이 1156편으로 209편에서만 거론된 ‘핵심이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거론이 되다가( $\chi^2=657.003$ ,  $df=1$ ,  $p<0.001$ ), 2009년부터는 ‘국가이익’이 1404편, ‘핵심이익’이 1358편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거론이 되고 있다( $\chi^2=0.766$ ,  $df=1$ ,  $p=0.381$ ). 심지어 2009년, 2010년, 2012년 그리고 2014년에는 ‘핵심이익’의 거론 빈도수가 더 많았다. 2009년은 후진타오 집권2기 2년차 때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 중국의 대외정책이 ‘공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논쟁이 가열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인민일보에서 ‘핵심이익’ 개념이 급증한 사실은 이런 변화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집권 시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sup>23)</sup> 후진타오 집권 10년 동안 두 개념(국가이익: 1684편; 핵심이익: 1025편)의 빈도수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에 반해( $\chi^2=160.310$ ,  $df=1$ ,  $p < 0.001$ ), 시진핑 집권 3년 10개월 동안의 빈도수는(국가이익: 752편; 핵심이익: 700편)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chi^2=1.862$ ,  $df=1$ ,  $p=0.172$ ). 이를 통해 시진핑은 집권한 이후 후진타오 집권2기 때부터 보여 온 ‘핵심이익’ 강조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국가핵심이익 거론 빈도(키워드 기준)



‘국가핵심이익’ 빈도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시진핑이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2013년을 기점으로 그 빈도수가 급증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국가핵심이익’을 키워드로 2001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27일까지의 인민일보 전문을 검색한 결과, 2004년 처음으로 이 개념이 사용된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키워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기간에 총138편의 기사에서 165번 거론이 되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7번만 거론이 되다가, 2013년 28번으로 증가하였고, 이때부터 연 평

23) 중국의 ‘당-국가’(party-state)체제 특성상,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와 국가주석의 임명 시기는 다르다. 시진핑의 경우 2011년 11월에 총서기가 되지만, 국가주석은 2013년 3월에야 임명이 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인민일보에서의 ‘국가핵심이익’ 거론 빈도의 전반적인 경향 파악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2013년을 기준으로 잡았음을 밝히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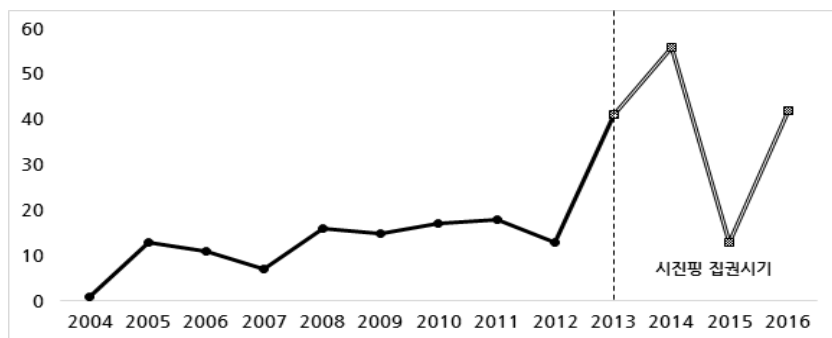
균 26번 거론이 되고 있다. 2015년에 17번으로 빈도수가 갑자기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2016년 10월 27일 기준 23번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sup>24)</sup> 집권 시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후진타오 집권 10년에 비해, 시진핑 집권 3년 10개월 동안의 빈도수가 더 많음을 발견할 수 있다. 2012년까지 총62번 거론이 된 것에 비해, 2013년에서 2016년 10월 27일 사이에 총103번이나 ‘국가핵심이익’이 거론되었다( $\chi^2=10.188$ ,  $df=1$ ,  $p<0.01$ ). 이뿐만 아니라, 후진타오 집권 시기 후진타오 등 주요 지도자들의 발언이 거의 인용되지 않은 것에 비해, 시진핑 집권 시기 시진핑의 국가핵심이익 관련 발언은 직·간접적으로 인용이 되고 있는 것 역시 발견할 수 있다. 연도별 인용 상황을 살펴보면, 2014년(42%)을 제외하고, 연평균 23%의 비율로 지속적으로 인용이 되고 있다.

국가핵심이익 이슈(혹은 문제)를 기준으로 살펴봐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sup>25)</sup> 국가핵심이익 관련 이슈는 상기 기간 동안 총138편의 기사에서 총263번 거론이 되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3번 거론이 되다가, 2013년 41번으로 증가하였고, 이때부터 연평균 38번 거론이 되고 있다. 이 기준의 빈도수 역시 2015년에 13번으로 갑자기 줄어들었다가 2016년 10월 27일 기준으로 42번으로 다시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집권 시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후진타오 집권 시기 동안 총111번 거론된 것에 비해, 시진핑 집권 3년 10개월 동안 이미 총152번이나 거론이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chi^2=6.392$ ,  $df=1$ ,  $p<0.05$ ). 이런 양적인 증가는 비단 시진핑 집권 시기 국가핵심이익(혹은 핵심이익)이 중요한 개념이 되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핵심이익 관련 이슈와 문제들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4) 2015년 빈도수가 낮아지는 이유에 대한 분석은 후속연구에서 진행할 예정임을 특별히 밝힌다.

25) 국가핵심이익 이슈는 편수에 상관없이 포괄적 주제와 구체적 이슈 당 거론 빈도수를 조사한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국가핵심이익 거론 빈도(이슈기준)



한편, ‘핵심이익’의 거론 빈도수와 비교분석을 해보면, 후진타오 집권2기 때부터 핵심이익 개념을 중시하기 시작하지만, 국가핵심이익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핵심이익’은 시진핑 집권시기부터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서로의 핵심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거론되고 있는 핵심이익 개념은 후진타오 집권2기 2년차인 2009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의 핵심이익이 무엇인지 분석이 가능한 국가핵심이익 개념은 시진핑 집권1기 1년차인 2013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즉, 이를 통해 시진핑 집권 시기에 들어서서 중국은 자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규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그 내용과 적용 범주를 계속해서 수정 및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포괄적 주제와 구체적 이슈를 후진타오 집권시기와 비교해 볼 때, 시진핑 집권1기 동안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 2>에서 <표 7> 참조). ①시진핑 집권1기 동안 인민일보에 거론된 국가핵심이익과 관련 이슈는 후진타오 집권 10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다. 2012년까지 총21개의 포괄적 주제와 구체적 이슈가 거론된 것에 비해, 2013년부터 2016년 10월 27일 사이에 6개가 빠지고, 16개가 추가되어 31개 포괄적 주제와 구체적 이슈가 거론되었다. ②기존의 ‘국가주권’, ‘국가안보’, ‘영토완정’, ‘국가통일’ 그리고 ‘중국 헌법이 확립한 국가정치체제와 사회의 전반적 안정’ 국가핵심이익과 관련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거론이 되면서, ‘경제사

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보장'과 관련된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다. 특히 후자에 속하는 이슈들은 시진핑 시기에 들어 국가핵심이익의 범주에 많이 포함이 되고 있다. ③'영토완정' 국가핵심이익과 관련하여, 2013년까지는 '다오위다오' 이슈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다가 2014년부터는 '남중국해' 문제와 '동중국해' 문제처럼 특정 해역을 명시하기 시작하였다. 즉, 시진핑 집권 1기 중국은 기존의 외교안보 분야에 치중되어 있던 국가핵심이익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까지 확대하고 있고, '국가안보'('한반도'이슈)와 '영토완정' 국가핵심이익과 관련해서는 특정 지역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중국 국가핵심이익 포괄적 주제별 구체적 이슈와 특징

각각의 이슈들은 여러 방면의 국가핵심이익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기 때문에 특정 핵심이익 범주로 분류하기 힘든 점이 있다. 한 예로 '해양권익'같은 경우 '주권', '안보', '발전이익' 세 가지 포괄적 주제의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다. 심지어 '대만'문제 같은 경우는 앞서 제기한 것처럼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의 맥락에서 많이 거론되었다. 하지만, 특정이슈마다 논쟁의 중점 사항이 있고 국가핵심이익 수호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최대한 명확한 분류는 이슈별 문제해결 방안 연구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의 『중국의 평화발전』에서 규정한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기준(포괄적 주제)에 따라 인민일보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고, 각각의 구체적 이슈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거론되었는지 간략히 설명하였다.

#### (1) 국가주권

'국가주권' 국가핵심이익에 속하는 이슈에는 '티베트', '마카오', '신장', 그리고 '홍콩'(香港)문제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티베트'문제는 2008년도에 처음으로 거론된 이래 2012년과 2013년만 제외하고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티베트’문제와 관련하여 달라이 라마(Dalai Lama)의 외국 방문과 방문국가 지도층과의 회담은 중국 공산당이 가장 민감해 하는 구체적인 이슈이다.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티베트’문제는(‘대만’문제 포함)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에서 논의된 사항을 전하는 기사들에서 대부분 거론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이 기사들을 통해 정협 소속의 중국경제사회이사회(中國經濟社會理事會)와 정협 위원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중국종교계평화위원회(中國宗教界和平委員會)의 긍정적인 역할(‘신장’문제 포함)이 평가받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다.

‘마카오’문제는 2009년 마카오 특별 행정구 기본법 실시 10주년 행사 때 처음으로 거론이 되었다. 2016년 건국 67주년 행사에서는 ‘홍콩’, ‘대만’문제와 함께 ‘일국양제’(一國兩制), ‘항인치항’(港人治港), ‘오인치오’(澳人治澳) 등의 ‘독립’, ‘국가주권’, 그리고 ‘영토완정’의 맥락에서 제시되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독립자주적인 평화외교정책을 펼쳐야 함을 강조하였다.

‘신장’문제는 총6번 중 5번 모두 앞서 설명한 정협과 중국경제사회이사회와 중국종교계평화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거론이 되었다.

‘홍콩’문제 역시 ‘마카오’문제와 비슷한 맥락에서 거론이 되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2012년 6월 29일에 중국인민해방군 주홍콩부대 사령관 쟁스보(張仕波)와 왕정보(王增鉢)정치위원의 글이 실린 점이다. 이 글에서 이들은 국가핵심이익(‘홍콩’)의 수호가 군대주둔의 근본가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표 2〉 국가주권 관련 주제와 이슈

기점	이슈(문제)	집권 시기	
		후진타오	시진핑
2005년	국가주권	✓	✓
2006년	역사	✓	
2008년	티베트	✓	✓
2009년	마카오	✓	✓
2009년	신장	✓	✓
2012년	홍콩	✓	✓
2014년	독립		✓

(2) 국가안보

‘국가안보’ 국가핵심이익에 속하는 이슈에는 ‘영공안보’(領空安全)와 ‘한반도’문제 등이 있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한반도’문제가 중국의 핵심 이익에 속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한국 국내에서 존재했었다. 쟁쟁한 등의 연구에도 의하면 소수이기는 하지만 1.85%의 중국학자들이 ‘한반도’문제가 중국의 핵심이익 범주에 포함이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한다.<sup>26)</sup> 하지만, 인민일보에 대한 분석결과, 2016년 7월까지의 ‘한반도’문제가 국가핵심이익으로 거론되지 않았고, 한국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를 기점으로 중국의 핵심이익 범주에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sup>27)</sup>

〈표 3〉 국가안보 관련 주제와 이슈

기점	이슈(문제)	집권 시기	
		후진타오	시진핑
2008년	국가안보	✓	✓
2011년	영공안보	✓	
2015년	조국평화		✓
2016년	한반도(사드 배치)		✓

26) Jinghan Zeng et al. (2015), p.261.  
27) 2016년 7월 8일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 (3) 영토완정

‘영토완정’ 국가핵심이익에 속하는 이슈에는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 ‘해양권익’,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변경권익’(邊疆權益) 등이 있다. 이 다섯 가지 이슈 중 ‘변경권익’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양영토주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들이다. 이 중에서 ‘해양권익’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국의 ‘해양강국건설’(海洋強國建設)의 맥락에서 논의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 ‘해양자원개발능력 제고’, ‘해양경제 발전’, ‘해양생태환경 보호’ 등의 노력이 필요함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중국은 비록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발전노선을 견지하겠지만, 정당권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즉 해양강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핵심이익을 수호할 것이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중국해’문제는 핵심이슈라고 할 수 있다. 2014년과 2016년 각각 1편의 기사에서 ‘남중국해’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필리핀 간에 발생한 분쟁을 ‘해양권익’의 맥락에서 거론하였고, 2014년에는 ‘남중국해 각방 행위 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DOC)’ 문제가 ‘해양권익’의 차원에서 제시되었다.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문제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총 6번 거론이 되는데 그 중 3번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논하고 있고,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함께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2년 8월 21일 기사에서는 일본육상자위대의 미 해병대 ‘섬 탈환 작전’ 훈련 참가와 일본의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문제를 ‘미일안보조약’(The U.S. - Japan Security Treaty)에 적용시키려는 의도를 비판하였고; 2012년 12월 3일 기사에는 미국 참의원의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적용 주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고 있다. 한편, 2013년 11월 27일 기사에서는 중국 정부의 ‘동해방공식별구역’(東海防空識別區)에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지역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런 정책은 국가핵심이익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임을 밝히고 있다.

‘해양권익’과 ‘변경권익’ 투쟁 방법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2016년7월16일 기사에서 시진핑의 말을 인용하여 ‘유리유거유절’(有理有據有節: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절제가 있음)하게 투쟁하여야 하며, 군사 투쟁을 정치, 경제, 외교적 투쟁과 긴밀히 연계하여 국가핵심이익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4〉 영토완정 관련 주제와 이슈

기점	이슈(문제)	집권 시기	
		후진타오	시진핑
2005년	영토완정	✓	✓
2010년	다오위다오	✓	✓
2012년	해양권익	✓	✓
2014년	남중국해		✓
2016년	변경권익		✓
2016년	동중국해		✓

(4) 국가통일

‘국가통일’ 국가핵심이익에 속하는 이슈에는 ‘대만’문제가 있다. ‘대만’문제는 2004년에 처음 거론된 이래 2011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국가핵심이익으로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의 맥락에서 대만의 독립을 반대하고 대만 독립 세력의 의도와 행동을 저지할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다. 2008년과 2009년 기사에서는 조국의 ‘통일’문제임을 확실히 하고 있지만, 양안관계의 발전 추세 파악은 물론 외교적 노력을 통해 외국 의회, 외국 정부와 의원 그리고 민중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야 함을 함께 강조하였다. 2010년과 2013년 기사에서는 중앙정부의 대 대만 공작의 국정방침은 민족의 근본이익과 국가핵심이익을 실현한 것임을 주

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4년 9월 17일 기사에서는 중국종교계평화위원회의 ‘대만’문제 뿐만 아니라 ‘티베트’, ‘신장’ 그리고 ‘파룬궁’ 등 문제에서의 긍정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2015년 7월 10일 기사에는 ‘국가현대화’와 ‘조국평화통일’의 맥락에서 ‘홍콩’, ‘마카오’문제와 함께 ‘대만’문제가 거론되었다. 2016년 9월 30일과 10월 1일 기사에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국양제’, ‘항인치항’, ‘오인치오’ 등의 ‘독립’, ‘국가주권’, 그리고 ‘영토완정’ 문제와 독립자주적인 평화외교정책의 맥락에서 ‘대만’문제가 거론되었다.

〈표 5〉 국가통일 관련 주제와 이슈

기점	이슈(문제)	집권 시기	
		후진타오	시진핑
2004년	대만	✓	✓
2009년	국가통일	✓	✓

#### (5) 중국 헌법이 확립한 국가정치제도와 사회의 전반적 안정

‘중국 헌법이 확립한 국가정치제도와 사회의 전반적 안정’ 국가핵심이익에 속하는 이슈에는 ‘핵심가치관’, ‘이데올로기’, ‘파룬궁’, ‘국가정권’, ‘대중문화’ 그리고 ‘민족단결’과 ‘민족존엄’문제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민족단결’문제는 제일 먼저 거론이 되는데(2009년), 애국주의 정신을 고취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2011년 기사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데 전통을 드높이고, 애국애교 교육을 견지하며, 중국공산당의 리더십을 옹호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여 ‘민족단결’과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국가통용언어와 문자의 전파 및 보급은 ‘민족단결과 국가통일’, ‘국가주권과 민족존엄’의 맥락에서 국가핵심이익을 구현하는 전략적 조치임을 강조하였다.

〈표 6〉 중국 헌법이 확립한 국가정치제도와 사회의 전반적 안정 관련 주제와 이슈

기점	이슈(문제)	집권 시기	
		후진타오	시진핑
2009년	민족단결	✓	
2010년	핵심가치관	✓	✓
2010년	대중문화	✓	
2011년	국가정치제도와 사회의 전반적 안정	✓	✓
2011년	민족존엄	✓	✓
2013년	이데올로기		✓
2014년	파룬궁		✓
2016년	국가정권		✓

‘핵심가치관’은 2010년과 2014년에 각각 한 번씩 거론이 된다. 2010년 8월 27일 기사에서는 ‘대중문화’ 건설 강화와 ‘핵심가치관’의 확립은 국가 핵심이익 및 자국의 근본이익과 관련된 중대 문제에 공통된 가치를 형성 하는데 유리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4년 4월25일 기사에서는 ‘핵심가치관’을 ‘주권안보’, ‘영토완정’, ‘기본제도’와 함께 국가의 핵심이익임을 규정함과 동시에 전략적 마지노선임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국방과 군대는 최종역량임을 강조하였다.

‘이데올로기’는 서방 적대세력에 의한 중국의 서구화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서 거론이 되었다. 2013년 10월 22일 기사에 서방 적대세력에 의한 중국의 서구화와 사상적으로 분열시키려는 불순한 전략은 변화지 않을 것임으로 ‘이데올로기’ 영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2015년 9월 20일에는 좀 더 완화된 구체적인 주장이 제기가 된다. 2015년 기사에 의하면, ‘이데올로기’와 국가핵심이익 영역과 일환에 외국자본의 침투를 금지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이데올로기’ 속성은 있지만 국가핵심이익과 연관이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의 조건부 유입을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정권’은 국가안전법(國家安全法)의 국가보안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는 기사에서 ‘국가지권’, ‘통일과 영토완정’, ‘인민복지’, 그리고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 개념과 함께 거론되었다.

#### (6)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보장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보장’ 국가핵심이익에 속하는 이슈에는 ‘토지’문제, ‘데이터 주권’, ‘정보강역’, ‘인민복지’, ‘과학기술혁신’ 그리고 ‘중대형 국유기업의 핵심 상업기밀’ 등이 있다. 2011년 12월 30일 기사에서 현재의 각종 경제, 사회와 정치문제 등은 모두 ‘토지’문제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국가토지감찰기구의 지위와 사명은 국가핵심 이익과 중화민족의 장기이익을 대표한다고 하였다.

‘중대형 국유기업의 핵심 상업기밀’은 2013년 4월 9일 기사에서 거론이 되는데, 국민경제발전을 지탱하는 ‘중대형 국유기업의 핵심 상업기밀’은 국가핵심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국가기밀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표 7〉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보장 관련 주제와 이슈

기점	이슈(문제)	집권 시기	
		후진타오	시진핑
2008년	발전이익	✓	✓
2011년	토지	✓	
2013년	중대형 국유기업의 핵심 상업기밀		✓
2014년	데이터 주권		✓
2014년	정보강역		✓
2015년	국가 현대화		✓
2015년	인민복지		✓
2015년	과학기술혁신		✓

‘데이터 주권’은 2014년 5월 9일 정협 주석 위정썩(俞正聲)이 주최하는 당의 인사 주제 좌담회에서 쥔싼쉐서(九三學社) 중앙 부주석 라이밍(賴明)에 의해 건의되었다. 라이밍은 빅 데이터 등의 현대기술의 응용방면을 국가 전략화하고, ‘데이터 주권’을 국가핵심이익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5월 21일에는 데이터와 정부 거버넌스에 관한 기사가 또 실리기도 하였다.

‘정보강역’은 중공허난성위원회 당교의 쉐루이한(薛瑞漢)에 의해 제기가 되었다. 그는 2014년 4월 17일자 인민일보에 인터넷 공간은 국가주권이 확장된 새로운 강역이기 때문에 인터넷과 정보 보안을 국가안보문제로 다루어야 하고, ‘정보강역’을 국토강역과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민복지’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국가안전법 제2조의 국가보안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데, 국가보안에 대한 정의는 국가핵심이익과 기타 중대이익의 마지노선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과학기술혁신’(科技創新)은 중국과학원의 커정옌(柯正言)에 의해 제기가 되었다. 그는 2015년 7월 5일 기사에서 유인 우주비행, 위성항법, 데이터 안보, 선진핵에너지, 심해자원개발 등 영역에서의 과학기술 난관을 극복하고 협동과 혁신을 강화하여, 핵심기술 부분의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고, 국가핵심이익, 국방안보와 장기발전 등과 관련된 전략적으로 반드시 공략해야 할 영역의 핵심부분을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IV. 결 론

이번 연구는 중국의 구체적인 ‘핵심이익’ 이슈(혹은 문제)를 분석해 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가핵심이익 외연 확대, 시진핑 집권 시기의 국가핵심이익 그리고 구체적인 이슈별 맥락과 특징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2001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



월 27일자 인민일보 전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와 그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핵심이익의 외연 확대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2005년 기존의 ‘대만’문제에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이 추가된 이래 2016년까지 거의 매년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② 2008년부터는 ‘국가안보’, ‘발전이익’ 그리고 ‘티베트’문제가 추가가 되었다. ③ 2009년부터는 ‘국가통일’뿐만 아니라 ‘마카오’와 ‘신장’이슈가 국가핵심이익 범위에 포함이 되었다. 한편, 처음으로 ‘중국 헌법이 확립한 국가정치체도와 사회의 전반적 안정’과 관련된 문제, 즉 ‘민족단결’(2012년 이후 거론되고 있지 않음)이 거론이 되었다. ④ 2010년에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영토완정’ 이슈인 ‘다오위다오’가 거론이 되었고, ‘핵심가치관’과 ‘대중문화’가 추가되었다. ⑤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 헌법이 확립한 국가정치체도와 사회의 전반적 안정’ 관련 포괄적 주제와 구체적 이슈들이 거론이 되기 시작한다. ⑥ 2012년부터는 ‘해양권익’과 ‘홍콩’문제가 범주에 포함이 되기 시작한다. ⑦ 2013년부터는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보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슈들이 중국의 국가핵심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되어지고 있다. ⑧ 마지막으로 2016년 ‘한반도’ 이슈가 국가핵심이익의 맥락에서 거론이 되었다.

둘째, 집권시기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후진타오 집권2기 2년 차인 2009년부터 서로간의 핵심이익을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맥락으로 쓰이는 ‘핵심이익’이 ‘국가이익’과 비슷한 수준에서 거론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시진핑 집권 시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구체적인 핵심이익 파악이 가능한 ‘국가핵심이익’의 거론 빈도가 급증을 하게 된다. 한편, 시진핑 집권 시기에 들어 지속적으로 국가핵심이익을 구체화시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보장’과 관련된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고, ‘국가안보’와 ‘영토완정’ 국가핵심이익과 관련해서는 특정 지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포괄적 주제별 구체적 이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8> 참

조). ① ‘국가주권’ 국가핵심이익에 속하는 이슈에는 ‘티베트’, ‘마카오’, ‘신장’, ‘홍콩’ 그리고 ‘독립’과 ‘역사’문제 등이 있다. ② ‘국가안보’ 국가핵심이익에 속하는 이슈에는 ‘영공안보’, ‘조국평화’, ‘한반도 문제’ 등이 있다. ③ ‘영토완정’ 국가핵심이익에 속하는 이슈에는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변경권익’, ‘해양권익’, ‘남중국해’, 그리고 ‘동중국해’ 문제 등이 있다. ④ ‘국가통일’ 국가핵심이익에는 ‘대만’문제가 대표적이다. ⑤ ‘중국 헌법이 확립한 국가정치제도와 사회의 전반적 안정’ 국가핵심이익과 관련된 이슈에는 ‘핵심가치관’, ‘민족단결’, ‘민족존엄’, ‘이데올로기’, ‘파룬궁’, ‘국가정권’, ‘대중문화’ 등의 문제들이 포함이 된다. ⑥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보장’ 국가핵심이익과 관련된 이슈에는 ‘토지’, ‘데이터 주권’, ‘정보강역’, ‘국가현대화’, ‘인민복지’, ‘중대형 국유기업의 핵심 상업기밀’ 그리고 ‘과학기술혁신’ 등이 포함된다.

〈표 8〉 중국의 국가핵심이익과 관련 이슈

국가주권	국가안보	영토완정	국가통일	중국 헌법이 확립한 국가정치제도와 사회의 전반적 안정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보장
①티베트 ②마카오 ③신장 ④홍콩 ⑤독립 ⑥역사	①한반도 ②영공안보 ③조국평화	①다오위다오 ②남중국해 ③동중국해 ④변경권익 ⑤해양권익	①대만	①핵심가치관 ②민족단결 ③민족존엄 ④이데올로기 ⑤파룬궁 ⑥국가정권 ⑦대중문화	①토지 ②데이터 주권 ③정보강역 ④국가현대화 ⑤인민복지 ⑥핵심상업기밀 ⑦과학기술혁신

이상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은 ‘대만’, ‘티베트’, 그리고 ‘신장’ 등 세 가지 이슈를 제외하곤 국가핵심이익을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만 강조를 해 오다가 최근 들어 구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가이익 수호를 단순한 ‘구호’가 아닌 중요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등급화 시키고 있다. 국가핵심이익 외연확대 특징에 대한 이해는 향후 중국의 국내·외 인적, 물적 자원을 어느 지역과 이슈에 집중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핵심이익 이슈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2년 수교 이래 한-중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수교 당시의 ‘우호협력관계’(友好合作關係)는 김대중 정부 때의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面向21世紀的合作夥伴關係), 노무현 정부 때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全面合作夥伴關係)를 거쳐 이명박 정부 때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戰略合作夥伴關係)로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다. 미국과 헐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 이론적 예상과 달리 중국의 궤기에 ‘균형’(balancing) 전략이 아닌, ‘적극적 헤징’(active hedging) 전략을 선택하였고, 적극적이고 성공적인 ‘관여’(engagement) 전략을 펼쳤다고 평가를 받아왔다.<sup>28)</sup> 이런 노력의 결과로 중국은 한국의 여섯 개 분야에서 1위(six No. 1s)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이런 양국의 심화되는 경제 ‘상호의존’(interdependence) 관계는 중국 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한국의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sup>29)</sup>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보장’ 관련 국가핵심이익 이슈를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다는 점은 이를 둘러싸고 향후 양국 간의 마찰이 더욱 빈번히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지금의 ‘절대적 이익’ 관계에서 ‘상대적 이익’ 관계로 급속히 변환 수 있다는 것이다.<sup>30)</sup>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국가

28) Jae Ho Chung, “East Asia Responds to the Rise of China: Patterns and Variations,” *Pacific Affairs*, Vol.82, No.4 (Winter, 2009/2010), pp.665-672.

29) 미국 경제 주간지 포천이 선정한 2016년 세계 500대 기업에 중국 기업 110개가 이름을 올렸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72111223819720> (검색일: 2017.01.09). 다른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의 ‘한국과 중국의 기업경쟁력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중국의 상장기업은 8개 지표 중 5개 지표(수익성, 성장성, 자산규모, 특허출원 수, 해외 M&A 금액)에서 한국을 추월하였다고 한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60706.22003200437> (검색일: 2017.01.09).

30)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저서를 참고 바람. 정재호,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261-293쪽; 한국과 중국 간에 발생했던 혹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충돌 이슈에 대해서는 아래 연구 참고 바람. 정재호 편, 『중국을 고민하다: 한-중 관계의 딜레마와 해법』(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1).

안보' 측면에서 국가핵심이익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sup>31)</sup> 북핵문제 해결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많이 들인 이유 중 하나이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고자 하였고,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양국 간의 군사 핫라인을 개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sup>32)</sup> 비록 중국은 북한 정권의 안정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대 북한 제재에 합의와 실행을 하고 있지만, 제2차 북핵 실험 때의 대 북한 정책에 비하면 지난 3차에서 5차 북핵 실험 과정과 그 이후에 중국이 보인 대 북한 정책은 많은 진전을 보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33)</sup> 특히,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로 평가받고 있는 2270호(2016년 3월 2일)와 2321호(2016년 11월 30일)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이끌어 낸 점은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여행 20% 감축, 전기차 배터리 모범기준 안 강화,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그리고 '한-중 군사 교류 중단' 등 일련의 조치들은 향후 양국 관계 전망을 어둡게 한다. 2321호 결의안에 찬성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을 북핵 문제와 연결시켰다고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으나 정부 인사들을 확대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 7명의 방중과 환대가 암시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배치를 할 경우 한반도의 전략적 이슈를 북핵문제와 연결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과 비핵화를 추구하고자 한 지난 25년간의 한-중 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31) 한국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으로 인해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국가핵심이익으로 규정하였는지 여부는 다각도에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인민일보' 전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논하고 있음을 특별히 밝힌다.

32) 2015년 12월 31일 양국은 핫라인을 개통하였다. 하지만, 2016년 1월 6일 제4차 북핵 실험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핫라인을 걸었으나 시 주석은 받지 않았다.

33)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논문을 참고 바람. 이영학,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한 정책변화 분석」, 『국제정치논총』, 제53집 4호 (2013), 191-223쪽; 이영학,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신(新)북핵 정책 동향 및 시사점: 4차 및 5차 북핵 실험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40권 3호 (2016 가을), 49-85쪽.

작금의 상황에서 중국의 국가핵심이익을 단순한 수사적 어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향후 중국의 국가핵심이익은 어떠한 이슈의 추가로 외연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물론, 시진핑 집권1기와 비교할 때 집권2기 때 강조되는 이슈는 무엇인가에 대한 꾸준한 관찰이 필요하다. 특히, 혈맹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사이에서 ‘전략적 딜레마’ 상황에 빠져있는 한국은 개별 국가핵심이익 이슈의 핵심 논쟁사항이 무엇이며, 이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 간에 어떠한 형태의 충돌(정치경제적 제재에서 무력사용)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중국이 국가핵심이익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점에 ‘경열정랭’(經熱政冷, 경제에선 뜨겁지만 정치에선 냉랭하다) 특징의 한·중 관계가 과연 건강한 양국 관계인지 혹은 ‘경열정열’(經熱政熱)로의 발전은 가능한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 경제는 중국과 안보는 미국과 함께한다는 경제 전략과 안보 전략의 불일치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홍규. 「중국 핵심이익 연구 소고(小考)」. 『동북아연구』 제28권 2호 (2013), 292-323쪽.
- 김홍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한중관계」. 『전략연구』 통권 제61호 특별호(2014), 219-233쪽.
- 나영주. 「한반도 통일에 관한 중국의 인식과 전략」. 『국제정치연구』 제18집 2호(2015), 109-128쪽.
- 이영학.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한 정책변화 분석」. 『국제정치논총』 제53집 4호(2013), 191-223쪽.
- 이영학.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신(新)북핵 정책 동향 및 시사점: 4차 및 5차 북핵 실험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40권 3호(2016 가을), 49-85쪽.
- 정재호.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 정재호 편. 『중국을 고민하다: 한·중관계의 딜레마와 해법』.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1.
- Chung, Jae Ho. “East Asia Responds to the Rise of China: Patterns and Variations.” *Pacific Affairs*. Vol.82, No.4 (Winter, 2009/2010). pp.657-675.
- Zeng, Jinghan, Yuefan Xiao and Shaun Breslin. “Securing China’s Core Interests: the State of the Debate in China.” *International Affairs*. Vol.91, No.2 (2015). pp.245-266.
- Johnston, Alastair Iain. “How New and Assertive is China’s New Assertiveness?” *International Security*. Vol.36, No.4 (Spring 2013). pp.7-48.
- Yoshihara, Toshi and James R. Holmes. “Can China Defend a ‘Core Interest’ in the South China Se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34, No.2 (Spring 2011). pp.45-59.

章迪禹. “中國‘核心利益’之辯.” 『世界知識』 第19期(2011), pp.14-21.

張清敏, 李啟窺. “中國對外行為的思想根源探析.” 『外交評論』 第4期 (2011), pp.3-20.

『江澤明文選(第一卷)』. 北京: 人民出版社, 2006.

Campbell, Caitlin. Ethan Meick, Kimberly Hsu and Craig Murray. “China’s ‘Core Interests’ and the East China Sea.” <http://www.uscc.gov/sites/default/files/Research/China's%20Core%20Interests%20and%20the%20East%20China%20Sea.pdf> (검색일: 2016.7.10).

Kleine-Ahlbrandt, Stephanie T.. Susan Shirk and Wang Yizhou. “Does Promoting ‘Core Interests’ Do China More Harm Than Good?” <http://www.chinafile.com/conversation/does-promoting-core-interests-do-china-more-harm-good> (검색일: 2016.6.25).

Oster, Shai. Andrew J. Nathan, Orville Schell, Susan Shirk, Tai Ming Cheung and John Delury. “What’s Really at the Core of China’s ‘Core Interests’?” <https://www.chinafile.com/.../whats-really-core-chinas-core-interests> (검색일: 2016.6.25).

Swaine. Michael D.. “China’s Assertive Behavior – Part One: On ‘Core Interests’.” <http://www.hoover.org/research/chinas-assertive-behavior-part-one-core-interests> (검색일: 2016.10.28).

“U.S.-China Joint Statement.”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us-china-joint-statement> (검색일: 2016.11.20).

“楊潔篪: 中國外交以維護國家主權安全和發展利益以促進世界和平與發展為己任.”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0-03/07/content\\_13115174.htm](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0-03/07/content_13115174.htm) (검색일: 2016.10.28).

“《中国的和平发展》白皮书(全文).”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1-09/06/c\\_121982103.htm](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1-09/06/c_121982103.htm) (검색일: 2016.10.28).

[https://www.eai.or.kr/data/bbs/kor\\_report/201105069371864.pdf](https://www.eai.or.kr/data/bbs/kor_report/201105069371864.pdf) 검색일: 2016.10.28).

<http://www.people.com.cn/GB/50142/104580/index.html> 검색일: 2017.1.4).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72111223819720> 검색일: 2017.01.09).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60706.22003200437> (검색일: 2017.01.09).





<Abstract>

## **Periodic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China's Core Interests' Expansions**

Lee Mingy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lineate specific issues pertaining to China's core interests, by analyzing articles published on the People's Daily. The following are the findings derived from the content analysis.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National Core Interest' as a keyword, searching the entire archived texts of the People's Daily from January 1, 2001 to October 27, 2016.

First, according to the frequency-per-year of the keyword and specific issues published in the People's Daily, it can be found that the frequency during the 10 years under the leadership of Hu Jintao is much lower compared to the frequency during the three year and 10 month period of Xi Jinping's leadership, just until October 2016. It also shows that Xi Jinping's relevant speeches have been quoted both indirectly and directly at a much higher rate than did those of other leaders during the era of Hu Jintao. This can lead to mean that 'National Core Interests' has not only become an important concept for China's foreign policy but also that the specific issues and topic areas have been diversifying during Xi Jinping's leadership.

Second, distinguishing between general topics and specific issues by year, until 2008 the most frequent general topics were 'National Sovereignty' and 'National Reunification', of which pertaining specific issues include 'Taiwan', 'Tibet', 'Macao', and 'Xinjiang'. During the same

period, ‘National Secur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were some other frequent general topics, while the general topic of ‘Economic Advancement’ was not mentioned until 2008. From 2010, the specific issues pertaining to ‘China’s Political System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and Overall Social Stability’ and ‘Basic Safeguards for Ensuring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have gradually begun to be mentioned.

Third, the following is the list of specific issues per general topic. ① The specific issues sortable under the general topic of ‘National Sovereignty’ include ‘Tibet’, ‘Macau’, ‘Xin Jiang’, ‘Hong Kong’, ‘Independent’ and ‘History’. ② The specific issues pertaining to ‘National Security’ are ‘Airspace Security’, ‘Peaceful Country’ and ‘Korea Peninsula’. ③ The specific issues pertaining to ‘Territorial Integrity’ are ‘Diaoyu Islands/Senkaku Islands’, ‘Border Rights and Interests’, ‘Maritime Rights and Interests’, ‘South China Sea’ and ‘East China Sea’. ④ The specific issue pertaining to ‘National Reunification’ is ‘Taiwan’. ⑤ The specific issues pertaining to ‘China’s Political System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and Overall Social Stability’ include ‘Core Values’, ‘National Solidarity’, ‘National Dignity’, ‘Ideology’, ‘Falun Gong’, ‘Political Power’ and ‘Public Culture’. ⑥ The specific issues pertaining to ‘Basic Safeguards for Ensuring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clude ‘Land’, ‘Data Sovereignty’, ‘Information Territory’, ‘National Modernization’, ‘People’s Welfare’, ‘Large Scale State-Owned Enterprises’ Core Business Secret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Key words:** Core Interests, People’s Daily, National Sovereignty, National Security, Territorial Integrity, National Reunification, China’s Political System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and Overall

Social Stability, Basic Safeguards for Ensuring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논문투고일: 2017. 03. 20]

[심사의뢰일: 2017. 03. 24]

[게재확정일: 2017. 04. 17]

K C I